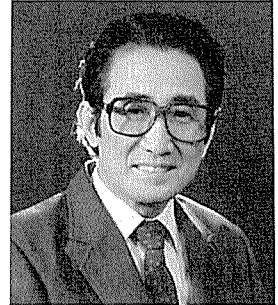


국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원자력계의 역할

—우리 원자력 사업의 자랑스러운 출발점이 되기를—



박 익 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명예회장

오늘 우리는 IMF사태를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여러 형태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살아 온 『지금까지의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독선적인 이기주의』에 준엄한 힐책과 냉정한 자기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체질개선을 하루빨리 개조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전사업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오점과 불명예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항상 우리끼리 모여 자화자찬하는 예년의 관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 허심탄회하게 냉정히 자신을 뒤돌아 보며 새로이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사업은 1978년 첫 가동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우리의 경제성장과 복지사회건설 그리고 우리의 문화생활에 그 어떠한 에너지원보다 깨끗한 에너지동력으로 기여하여 왔고 1970년대의 1·2차 원유파동을 이겨내는 대체에너지의 역할도 크게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의 원전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종사한 원자력 관계인들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원망과 깊은 한에 매친 따갑고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는 원전지역주민과 원전관계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회피했다고 해서 잊어지는 감정이 아니며, 현재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앞으로 계승할 우리 원자력 관계인들이 계속 짊어져야 할 정신적 부담이요 사회적 책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원전부지의 확보과정이 어느 정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원전부지 말단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방사선 작업하는 임시고용원의 안전관리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전제일』이라는 원칙을 지켰으며 그러한 임시고용원을 거느리고 일한 원자력 하청업체에 대하여 우리는 원자력법상의 자격요건을 과연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며

더욱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원전가동을 승인하고 운전을 계속해

은 우리 원전사업이 과연 『안전제일』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온배수의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와 평가를 원자력규제 기관이 외면하였다면 우리의 원전안전관리가 과연 우리의 원자력법을 잘 준수하였고 또 우리의 안전관리가 잘 수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원전사업관계자들이 그 동안 반복해 온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서운하고 지겨운 생각을 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원자력법의 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반핵운동을 키운 커다란 계기가 되고 또 그 원동력 구실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마음대로 감추고 미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는 결코 이 사실을 감추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이며, 사실은 사실대로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냉엄한 자기비판과 자기반성을 하면서 우리의 원자력사업을 새로이 태어나게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원전사업,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사업은 결코 이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다시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오늘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문제는 안전성 현안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의 증진과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건과 사고,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 국민적 인식과 이해의 변화에 따라 최근 안전문제의 국제화 및 안전규제의 국제규범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협력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설비를 공급하는 나라와 이것을 도입하는 나라 사이에 주로 기술지원하는 형식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나, 지금은 양국사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협력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특징이요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6년 말 현재 13개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부차원의 정례회의를 갖고 있고, 한편 아세아 지역내의 국가간의 원자력안전협력을 위한 회의가 1996년과 1997년 일본동경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는 한반도에너지 개발지구 즉 KEDO에 의해 선정되어 현재 북한 신포지역에 건설 중에 있는 우리의 한국표준형경수로에 대해 우리의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이 교육훈련 될 것이고 우리의 원자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규칙이나 준칙 등도 참고될 것입니다.

1997년 한국은 IAEA에서 국제원자력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한국은 65개국이 서명한 나라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협정내용을 보면, 부지선정·설계·건설·운전·인력확보·안전성 평가 및 품질보증, 배상계획 등을 포함한 협약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 나라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회환경 속에서 『지도자가 어떠한 일을 결심할 때 내가 지금 결심하고 결재하는 일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하는 것을 생각하며 일하는 지도자는 결코 나쁜 정치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결심하고 결정한 일들이 앞으로의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원자력사업은 지금보다 더 역사에서 훌륭하게 평가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원자력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 온 지난 우리 자신을 냉엄하게 자기비판하는 동시에 이것이 다시 우리의 새롭고 자랑스러운 출발점이 되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원하는 바입니다.